

檢,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 野, 체포동의안 앞두고 고심

단식 19일차… 건강 악화 징후에 응급치료 후 녹색병원서 안정 취해 이 대표, 병상서도 단식 의지 밝혀 野,尹 정부·검찰 규탄 피켓시위

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선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응수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게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건강 악화 징후가 나타나자 이날 구급대를 불러 이 대표를 서울 여의성도병원으로 이송했다. 그곳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중랑구 소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에 녹색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게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으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

록 했으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는 등 총 800만달러를 뇌물로 보았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16일 의총에서 결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용산에 가서 상임위는 교권보호 입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회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가·부결이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다시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가결되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는 일부 의원들은 표결이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말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

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등은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 시작할 때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하고 옹호하는 것은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韓, 기업가형 정부 돼야”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천기술 R&D 특별예산 편성 나서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발목… 대책 강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

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과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

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고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 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대진표 확정… “민생안정” vs “정권심판”

(與)

(野)

민심 척도 확인할 총선 전초전尹 vs 文, 檢 vs 警 대리전 구도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출하면서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직선거이자 유일한 수도권 선거로, 민심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맞붙는 첫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총선 위기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당내 경선을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위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통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대 경찰’의 대리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정의당에서는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진보당에서는 한의사인 권혜인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보궐선거 총력전에 나설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내세우며 ‘민생안정’을 앞세워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21일에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격 선거전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강서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선거”라며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을 내팽개친 민주당,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조작’과 ‘공작’이 아닌 오로지 ‘민’의에 의한 ‘진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띄우며 김 후보자가 보선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 지역 현역의원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

서울)·한정애(강서병)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만큼, 조직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진 후보의 사무실에서 강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 후보자와 한 몸이 돼 강서구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39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김 전 수사관은 쓰지 않아도 될 세금 39억원을 쓰게 한 것도 모자라 다시 출마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